

'96년 경제 정세

박 영 삼(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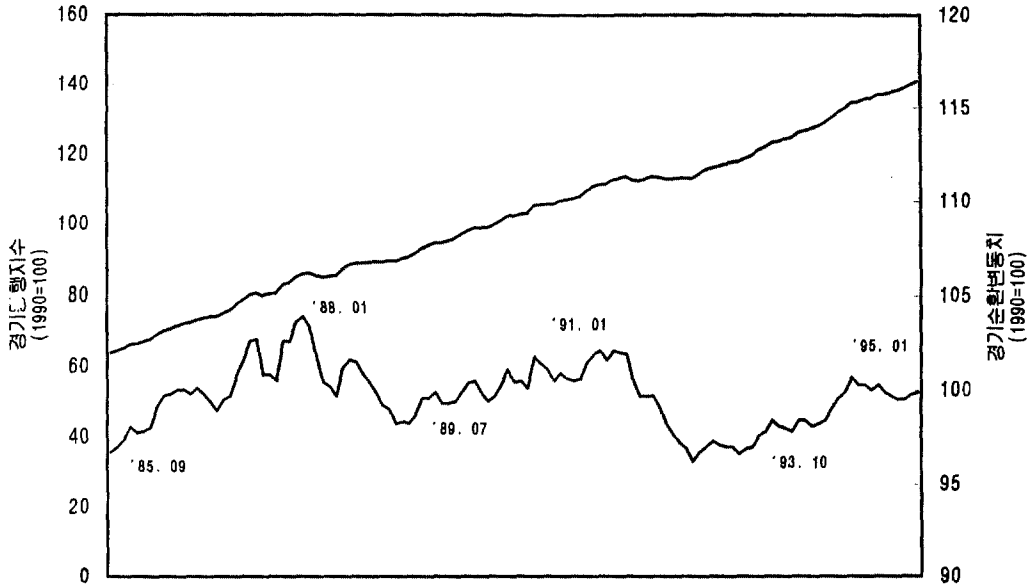
1. 한국경제의 동향과 '96년 전망

1) 경기변동

자본주의적 경기순환은 세계경제 단위에서나 국민경제 단위에서나 항상 관철되고 있다. 96년을 맞는 한국경제는 경기종합지수를 표시한 <그림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93년 1/4분기 이후 3년간 지속되었던 경기 확장세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의 경기순환은 6공화국 출범기의 상승국면을 떠올릴 수 있다. 85년을 기점으로 한 '3저호황'은 89년의 투기 붐으로 이어지면서 절정에 달했다가, 91년까지의 혼란스런 조정기를 거쳐 문민정부 출범 직전까지 하강국면을 계속해 왔다. 그러다가 93년 1월 이후부터는 다시 회복, 상승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95년 1/4분기를 시작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일단 경기하강 국면으로 재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몇 년간의 경기변동을 살펴볼 때 순환주기가 약 2~3년의 기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회복이 다시 재개되는 것은, 9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하강을 얼마나 순조롭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호황기에 노출된 불합리한 경제요소들을 어떻게 정리, 안정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하겠다.¹⁾

1) 최근 우성건설의 부도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연쇄부도에 대해 경기가 급랭할까봐 우려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기수축 국면에서 재연될 지 모르는 제2, 제3의 우성건설에 대해서

<그림 1> 경기 변동 추이('85년 - '95년)



한편 경기하강과 관련하여 임금교섭과 경기상황의 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투자를 결정하거나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금리나 유가, 교역환경 등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이 중시되겠지만, 임금인상투쟁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임금교섭 이전의 경제활동 실적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생계비 원칙에서 전번 임금인상 이후에 생활비가 얼마나 더 올랐는지, 즉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또는 기업의 지불능력 기준이 되는 경상이익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실적뿐만 아니라 전망치도 역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임금교섭은 앞으로 생산될 상품에 투입되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의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제가 호황을 맞아서 기업활동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생산비를 깎기보다는 가능한 한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수요도 늘려 잡게 될 것이다. 이 때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력공급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30대 그룹의 하나가 부도를 냈다는 사실은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는 이런 분위기가 전체 기업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을 통제하는 노조의 입장이 유리해 지며, 임금인상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반대로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들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물진이 잘 안 팔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본간의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고, 따라서 가능한 한 생산비를 줄여서 남보다 싸게 팔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축소에 대응해서 정리해고나 부서통합 등을 통해 고용규모를 축소하려고 할 것이다. 이 때에는 사용자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때 '96년의 임금인상투쟁을 둘러싼 경제환경은 노사간의 격렬한 대립을 예상하게 한다. 경기는 하강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반면 지난 해의 경제실적은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경기정점에서 노사대립은 가장 격렬해지는 경향이 있다. 서로가 할말이 많기 때문이다.

2) '95년 경제실적과 '96년 전망

경제성장

'95년에도 한국경제는 9.3%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그 규모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²⁾ 여기에는 선진국 경제의 회복과 교역증대, 엔고 등 대외여건의 호조로 수출부문의 활기를 띠고, 합리화와 생산규모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이 주요한 동력이었다.

각 기관들은 96년에는 그 동안 성장을 주도해 왔던 설비투자와 수출의 신장세가 둔화되는 대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7.4% 내외로 성장이 이루어져 경기의 연착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경기의 급작스런 냉각을 피하면서 견실한 안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임금인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가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필요한 시기라는 말이다.

2) 세계은행의 「'96 세계은행연감」에 따르면, 1994년 기준 한국의 총 GNP는 3,665억달러로서 세계 13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련, 멕시코와는 비슷하고 네덜란드, 호주보다는 규모가 더 큰 수준이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5-'94년 기간 동안 7.8%로 태국(8.2%)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표 1> 주요 경제지표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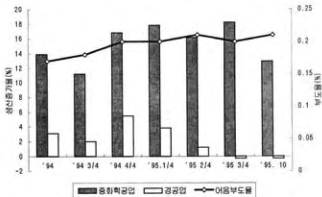
| | 1994 | 1995 | 1996 |
|------------|------|------|------|
| 국내총생산(GDP) | 8.4 | 9.3 | 7.4 |
| 총 소비 | 7.0 | 7.5 | 7.0 |
| (민간소비) | 7.4 | 8.1 | 7.5 |
| 고정투자 | 11.7 | 12.3 | 7.5 |
| (설비투자) | 23.3 | 17.0 | 7.2 |
| (건설투자) | 4.6 | 8.9 | 7.7 |
| 수 출 | 15.7 | 30.4 | 16.5 |
| 수 입 | 22.3 | 32.0 | 14.5 |
| 소비자물가 | 6.2 | 4.7 | 4.8 |
| 경제활동인구 | 2.6 | 2.1 | 2.0 |
| 취업자수 | 3.0 | 2.5 | 1.9 |
| 실업률 | 2.4 | 2.0 | 2.2 |

그러나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경기양극화는 이러한 성장과 활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못했음을 말해 준다. 산업생산 면에서 반도체와 컴퓨터, 기계장비, 자동차 등 금속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공업 부문은 <그림 2>에서와 같이 두자리수의 높은 생산증가율을 보인 반면, 신발과 섬유,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등 경공업 부문은 계속되는 침체와 생산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장 속에서도 중소기업 부도율이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경기양극화와 불균형 성장의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생산력의 파괴로서 국민경제의 자원이 대자본에게로 이전(수탈)되고 있음을 뜻한다. 비록 이것이 한편으로는 자본간의 경쟁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시장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산업간의 불균형 성장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³⁾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자본이 몰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그 부문의 자본과 인력, 시장을 재벌중심의 독점적인 영역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하겠다.

3)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총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부의 정책은 두 가지 방향을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의도적인 개입을 통해 자본축적을 조절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도적인 불개입 또는 정책수단을 고의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비독점 자본의 몰락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림 2〉 산업생산 동향과 경기양극화



경제성장의 산업부문간 불균형뿐만 아니라 기업간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양대 재벌그룹인 현대와 삼성에 고용된 종업원은 우리 나라 경제활동인구의 1%를 조금 넘을 뿐이지만, 두 재벌의 매출액은 '94년말 현재 GNP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10대 재벌그룹의 연간 매출액을 합치면 GNP의 66.6%에 달한다. 더구나 재벌그룹들의 자본축적 속도(자산증가율 연 17.0%)는 GDP(14.2%)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력 집중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들 10대 그룹의 '94년 경상이익은 2조9천6백76억원으로 '93년에 비해 무려 113%나 증가했으며, 순이익 역시 2조1백42억원으로 180%나 늘어났다.

수출입

한편 수출은 1,250억달러 실적을 기록해 87년 이후 가장 높은 30.4%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수입이 이보다 더 많은 32.0%나 증가한 1,250억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9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⁴⁾ 수입의 증가는 원자재와 자본재가 주도함으로써 수출을

위한 수입증가가 내수용 수입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입에 있어서도 경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반도체(73.3%)와 자동차(67.7%), 전자전기(42.6%) 등 핵심부문은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그 비중도 전체수출의 4분의 3(72.3%)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경공업 부문은 계속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낮게 나타났다. 수출산업이었던 경공업 부문의 지속적인 침체는 이들 산업의 고용불안과 함께 이를 대체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문제, 불안정고용의 문제들을 심화시키고 있다.

'96년에는 세계교역의 성장세 감소와 엔고 효과의 후퇴 등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더 낮아져 무역수지 적자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제품구조별 수출동향

(단위 : %)

| | '91 | '92 | '93 | '94 | '95(e) |
|-------------|------|------|------|------|--------|
| 전체 수출증가율 | 10.5 | 6.6 | 7.3 | 16.8 | 30.4 |
| 중화학제품 수출증가율 | 17.3 | 11.7 | 13.0 | 21.4 | 39.8 |
| 경공업제품 수출증가율 | 1.7 | -0.9 | -2.3 | 6.3 | 8.7 |
| 중화학제품 수출비중 | 59.9 | 62.7 | 66.1 | 68.7 | 72.3 |
| 경공업제품 수출비중 | 35.5 | 33.0 | 30.0 | 27.3 | 22.7 |
| 전체 수입증가율 | 16.7 | 0.3 | 2.5 | 22.1 | 32.0 |
| 원자재 수입증가율 | 15.1 | -1.9 | 4.2 | 14.8 | 34.1 |
| 자본재 수입증가율 | 18.4 | 2.1 | -0.1 | 32.1 | 33.6 |
| 소비재 수입증가율 | 19.4 | 5.2 | 3.2 | 24.3 | 29.5 |

자료 : 통상산업부, 「'95년도 수출입 평가 및 '96년도 전망」, 1996. 1.

4) 수출증가가 수입확대를 수반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도입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95년에 개도국과의 무역에서 174억달러의 흑자를 얻은 반면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288억 달러의 적자(대일본 적자가 151억달러)를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자본주의의 대일 의존(종속성)이나 무역적자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정부나 자본의 입장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기술적인 자립을 꾸준히 추구하거나 수출을 수입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의 무역적자가 GNP의 2.2% 정도로 경제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 10대상품 수출순위

(단위 : %)

| 순위 | | '94 | | '95 |
|----|--------|------|--------|------|
| 1 | 전자전기 | 32.8 | 전자전기 | 35.5 |
| 2 | 섬유류 | 18.0 | 섬유류 | 14.8 |
| 3 | 화공품 | 6.3 | 화공품 | 6.7 |
| 4 | 철강제품 | 5.8 | 자동차 | 6.7 |
| 5 | 자동차 | 5.6 | 철강제품 | 5.8 |
| 6 | 선박 | 5.1 | 일반기계 | 4.4 |
| 7 | 일반기계 | 4.4 | 선박 | 4.2 |
| 8 | 신발 | 1.9 | 유류제품 | 1.9 |
| 9 | 플라스틱제품 | 1.8 | 플라스틱제품 | 1.8 |
| 10 | 유류제품 | 1.7 | 금속제품 | 1.4 |

주 : ()는 총수출대비 비중임.

자료 : 통상산업부, 위의 자료.

<표 4> 산업별 수출 전망

(단위 : 억달러)

| 산 업 | '94 | '95 | '96 |
|-------|------------|--------------|-------------|
| 자동차 | 52 (25.7) | 80 (53.5) | 92 (15.8) |
| 조선 | 45 (38.8) | 46 (3.4) | 55 (18.2) |
| 가전 | 71 (13.7) | 78 (10.4) | 87 (10.9) |
| 산업용전자 | 55 (10.8) | 72 (31.3) | 86 (19.3) |
| 전자부품 | 178 (61.4) | 274 (53.8) | 377 (37.6) |
| 일반기계 | 52 (36.0) | 73 (41.7) | 101 (38.0) |
| 철강 | 56 (-15.5) | 72 (28.9) | 69 (-4.7) |
| 석유화학 | 19 (26.2) | 30 (60.5) | 28 (-6.8) |
| 섬유 | 173 (8.7) | 184 (6.3) | 188 (2.2) |
| 신발 | 18 (-22.9) | 15 (-14.3) | 14 (-8.2) |
| 총 수 출 | 906 (16.8) | 1,258 (31.0) | 1,469(16.8) |

물가

'95년도에 소비자물가는 전년말대비 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 요금이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물가인상을 주도했으나, 농산물의 수입확대와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예상보다 낮은 물가인상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96년도에 4.8% 정도의 낮은 인플레이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총선에 따른 통화증발과 인플레이심리가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자산계층의 과소비나 외환유입에 따른 통화확대가 물가인상을 부채질할 위험이 높다. 연초부터 대학 등록금이 20% 이상 인상되는 등 물가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금리 중심으로 통화를 관리하

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볼 때 통화관리가 느슨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⁵⁾ 그러나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국민들의 물가불안 심리와 연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이다. 지난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이나 기업의 경영실적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인상 요구가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매년 여론조작부터 하려고 드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정부 불가정책의 오류를 지적하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너무도 당연한 것임을 알리는 일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

<표 5> 소비자물가 전망

(단위 : %)

| | 1994 | 1995 | 1996 |
|-------|------|------|------|
| 소비자물가 | 6.2 | 4.7 | 4.8 |
| 농축수산물 | 12.3 | 4.0 | 4.5 |
| 공업제품 | 3.0 | 2.6 | 2.8 |
| 서비스 | 6.5 | 6.7 | 7.1 |

주 : 연평균 기준

기업 경영

'95년 상반기의 제조업 매출액은 22.8%나 증가하였고, 총자본에 대비한 이윤율도 4.18%로 '94년에 비해 65% 늘어났다. 노동생산성에 해당하는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도 20.21%나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출액과 이익, 노동생산성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인건비는 오히려 94년보다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결과 생산된 총가치에서 노동자들의 몫을 말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93년 50.84%에서 '94년에는 50.51%로 떨어졌고, '95년에는 47.96%로 다시 하락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93년 초반을 전후한 경기후퇴기에 각 기업들이 합리화전략을 통해 고용규모를 축소하면서, 용역전환, 비정규직 고용확대 등 비용요인들을 줄여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노동자들은 점점 많은 이익을 내면서도 점점 더 작은 대가를 보상받고 있는 것이다.

5) 모 재벌그룹 계열 일간신문은, 우성건설 부도에 관한 기사에서, 우성의 부도로 통화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해석을 담고 있다. 물론 대재벌의 부도는 이에 관계된 수많은 기업들 사이에 형성된 신용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화감소 효과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공급을 확대해놓고 나면 나중에 통화유동속도가 정상화될 때의 대책은 또 통화환수라는 악수를 두어야만 할 것이다.

<표 6> '95년 상반기 주요 경영지표(제조업)

(단위 : %)

| 지 표 | '93 상반기 | '94 상반기 | '95 상반기 |
|------------|---------|---------|---------|
| 매출액증가율 | 6.90 | 15.82 | 22.78 |
| 총자본경상이익률 | 1.97 | 2.54 | 4.18 |
| 매출액경상이익률 | 2.17 | 2.73 | 4.18 |
| 1인당부가가치증가율 | 11.60 | 17.60 | 21.89 |
| 1인당매출액증가율 | 12.01 | 16.04 | 20.21 |
| 1인당인건비증가율 | 9.62 | 14.85 | 14.68 |
| 부가가치율 | 25.73 | 26.60 | 26.88 |
| 노동소득분배율 | 50.84 | 50.51 | 47.96 |

자료 : 한국은행,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1995. 10.

2. 노동경제 상황

1) 고용

'95년의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천1백12만2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3만4천명 증가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를 나타내고 있다. 취업자는 54만명이 증가했는데, 농업 어업은 16만명이 감소한 반면, 주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산업에서 65만명 이상이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제조업의 취업자는 6만명 정도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노동자(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는 12만명 증가한데 비해 임금노동자가 42만명 증가했고, 그 중에서도 상시 고용되는 노동자가 38만명 증가하여 경기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보다는 40~49세의 장년층과 55세 이상의 노년층의 취업이 각각 30만명과 11만명의 증가를 보여 이들이 전체 신규취업자의 76.5%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주당 17시간 미만으로 고용되는 취업자가 5만6천 명 증가하여 20.2%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게 볼 때,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증장년층 중심의 임금노동자들이 서비스업에 취업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파트타임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아직 규모는 적지만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노동자들은 산업적인 특성으로 보나 연령이나 지위의 특성상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가 용이하지 않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조직화 노력과 함께 증장년층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 실태파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7>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

| | '94 2/4 | '95 2/4 | '95 3/4 | '94 2/4 | '95 2/4 | '95 3/4 | |
|------------|---------|---------|---------|------------|------------|------------|------------|
| | | | | 전년동 기대비 | 전년동 기대비 | 전년동 기대비 | 전년동 기차이 |
| 15세 이상 인구 | 33,006 | 33,472 | 33,641 | 1.7 | 1.8 | 1.9 | 635 |
| 경제활동인구 | 20,629 | 20,988 | 21,122 | 2.1 | 2.0 | 2.4 | 493 |
| 경제활동참가율 | 62.5 | 62.7 | 62.8 | | | | 0.3 |
| - 남 자 | 12,275 | 12,510 | 12,556 | 1.8 | 2.1 | 2.3 | 281 |
| (참가율) | 77.0 | 77.2 | 77.0 | | | | 0.0 |
| - 여 자 | 8,353 | 8,477 | 8,566 | 2.5 | 1.9 | 2.5 | 213 |
| (참가율) | 49.0 | 49.1 | 49.4 | | | | 0.4 |
| 취업자 | 20,181 | 20,582 | 20,722 | 2.5 | 2.5 | 2.7 | 541 |
| - 농림어업 | 2,953 | 2,751 | 2,787 | -4.5 | -6.2 | -5.6 | -166 |
| - 광공업 | 4,725 | 4,831 | 4,774 | 0.7 | 1.6 | 1.0 | 49 |
| 제조업 | 4,685 | 4,803 | 4,748 | 1.0 | 1.9 | 1.3 | 63 |
| - SOC 및 기타 | 12,503 | 13,000 | 13,161 | 5.0 | 4.9 | 5.3 | 658 |
| 건설업 | 1,823 | 1,924 | 1,936 | 6.5 | 7.0 | 6.2 | 113 |
| 도소매,음식숙박업 | 5,230 | 5,300 | 5,358 | 5.6 | 2.6 | 2.4 | 128 |
| 사업,개인,기타 | 3,676 | 3,930 | 3,986 | 4.3 | 7.3 | 8.4 | 310 |
| 금융,운수,전기 | 1,774 | 1,846 | 1,882 | 3.4 | 4.4 | 6.1 | 108 |
| - 자영업주 | 5,662 | 5,780 | 5,842 | 2.1 | 3.4 | 3.2 | 180 |
| - 무급가족 | 2,134 | 2,036 | 2,075 | -4.9 | -5.0 | -2.8 | -59 |
| - 상시근로자 | 10,586 | 10,926 | 10,966 | 4.7 | 3.6 | 3.6 | 380 |
| - 일용근로자 | 1,800 | 1,840 | 1,838 | 0.9 | 1.9 | 2.1 | 38 |
| 실업자 | 448 | 405 | 400 | -13.5 | -17.5 | -10.7 | -48 |
| (실업률) | 2.2 | 1.9 | 1.9 | | | | -0.3 |
| 비경제활동 | 12,377 | 12,485 | 12,519 | 1.0 | 1.6 | 1.1 | 142 |

<표 8>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추이

(단위 : %)

| | 1980 | 1985 | 1990 | 1994 |
|---------------|------|------|------|------------|
| 농림어업 | 34.0 | 24.9 | 17.9 | 13.6 (7.0) |
| 광공업 | 22.5 | 24.4 | 27.6 | 23.9(27.2) |
| . 제조업 | 21.6 | 23.4 | 27.2 | 23.7(26.9) |
| SOC 및 기타 서비스업 | 43.5 | 50.7 | 54.5 | 62.5(65.8) |
| . 전기,가스,수도업 | 0.3 | 0.3 | 0.4 | 0.4 (2.3) |
| . 건설업 | 6.2 | 6.1 | 7.4 | 9.0(13.5) |
| . 도소매,음식,숙박업 | 19.2 | 22.6 | 22.0 | 26.2(11.7) |
| . 운수,창고,통신업 | | 4.7 | 5.1 | 5.1(7.4) |
| . 금융,보험,부동산 | | 3.8 | 5.2 | 7.5(17.1) |
| . 기타 서비스업 | | 13.3 | 14.6 | 14.4(13.8) |

주) *()내 숫자는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임금

'95년 9월 현재 우리나라에 상시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18만9천원으로 94년에 비해 1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의 11.9%에 비해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90년의 18.8%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 94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 폭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표 9> 연평균 임금총액상승률

(단위 : %)

| | '90 | '91 | '92 | '93 | '94 | '95(1~9월) |
|-----|------|------|------|------|------|-----------|
| 상승률 | 18.8 | 17.5 | 15.2 | 12.2 | 12.7 | 11.4 |

임금내역별로 보면 정액급여(10.7%)와 특별급여(13.6%)의 상승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초과급여의 상승(13.8%)이 높게 나타나, 현재의 임금상승이 주로 경기호황에 의한 연장근로의 증가로 메워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16.6%)과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이 전 산업의 평균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임금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은 전 산업 평균보다 낮은 10.5%의 임금상승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내에 경기양극화에 따른 명암이 엇갈리는 업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임금상승의 격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별로는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500인 이상 대기기업의 임금상승폭(14.1%)이 가장 높고, 10-29인을 고용하는 영세업체의 임금상승폭(11.4%)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중장년층 중심의 임금노동자들이 서비스업에 취업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파트타임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아직 규모는 적지만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노동자들은 산업적인 특성으로 보나 연령이나 지위의 특성상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가 용이하지 않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조직화 노력과 함께 중장년층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 실태파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10> '95년 9월 누계 평균 산업 및 사업체규모별 월평균임금

(단위 : 천원, %)

| 산 업 | 임금총액 (증가율) | 지수 | 기 업 규 모 | 임금총액 (증가율) | 지수 |
|------------------|---------------|-----|---------------|---------------|-----|
| 전산업 | 1,189(11.4) | 100 | | | |
| 광업 | 1,152 (7.2) | 97 | | | |
| 제조업 | 1,092(10.5) | 92 | | |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1,566(11.9) | 132 | 전규모 | 1,189(11.4) | 100 |
| 건설업 | 1,348 (8.2) | 113 | 1규모(10-29인) | 1,062(11.3) | 89 |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1,137 (9.4) | 96 | 2규모(30-99인) | 1,085(11.4) | 91 |
| 숙박 및 음식점업 | 954(13.8) | 80 | 3규모(100-299인) | 1,143(12.6) | 96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1,044(13.5) | 88 | 4규모(300-499인) | 1,288(12.0) | 108 |
| 금융 및 보험업 | 1,778(16.6) | 150 | 5규모(500인 이상) | 1,458(14.1) | 127 |
|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1,107(13.7) | 93 | | | |
| 교육서비스업 | 1,954(13.0) | 164 | |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200(11.5) | 101 | | | |
| 기타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1,448 (8.5) | 122 | | | |

주 : ()내는 전년동분기비 임금상승률임.

지수로 표시한 것은 전산업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지수

자료 : 노동부, 「'95년 9월 임금.근로시간 및 입.이직동향」, 95. 12.

(매월노동통계 조사결과)

3) 노동시간

'95년 9월까지의 전 산업의 주당노동시간은 경기호황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 증가한 47.3시간을 보였다. 노동시간 중 가장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초과근로시간이다. 초과근로시간이 5.2% 증가하여 전체 노동시간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직과 이직동향을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입직초과를 나타냈고 광업과 음식숙박업은 이직초과를 보였다. 규모별로 보면 500인 이상 대기업과 10-29인 이하의 영세기업이 모두 입직초과를 보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30-99인 이하의 소기업이 가장 높은 이직률을 보여 이 부분의 기업체에서 인력난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노동생산성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비난해 왔다. 이러한 습관적인 비난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임금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편으로는, 임금인상이 생산성증가율을 초과해야만 소득분배가 개선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우리의 임금인상은 항상 노동생산성을 밀도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실질임금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항상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⁶⁾

이러한 사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리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94년도에 10.5%, '95년 1/4분기 및 2/4분기에 각각 13.1% 및 10.6%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선진국은 물론 경쟁상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만은 '95년 1/4분기에 9.5%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못 미치는 수준이고, 싱가포르의 '95년 1/4분기와 2/4분기에 2~3%대의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정도이다.

<표 11> 노동생산성 증가추이 비교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 '92 | '93 | '94 | '95 1/4 | '95 2/4 |
|------|------|------|------|---------|---------|
| 한국 | 10.7 | 12.5 | 10.5 | 13.1 | 10.6 |
| 대만 | 4.0 | 4.1 | 4.0 | 9.5 | |
| 싱가포르 | 2.6 | 3.8 | 5.3 | 2.7 | 3.6 |
| 일본 | -5.3 | 7.5 | 2.9 | 8.1 | 6.0 |
| 미국 | 1.2 | 2.9 | 3.0 | 2.2 | 0.8 |
| 캐나다 | -0.7 | 3.7 | 3.2 | 5.7 | 1.9 |
| 독일 | 0.5 | 11.9 | 10.4 | | |
| 스웨덴* | 7.8 | 10.9 | 12.0 | 7.8 | 7.3 |
| 스위스 | 4.5 | 10.3 | 12.7 | 7.3 | 5.6 |
| 영국 | 2.0 | 4.1 | 4.8 | 3.6 | |
| 프랑스 | 1.8 | 6.9 | 6.4 | 5.8 | |

주 : 분기별 자료는 3월, 6월 자료를 사용

자료 : IMF "국제금융통계(IFS)", 각국 통계월보

5) 산업재해

우리 나라의 산업안전 수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편에 속한다. 정부는 산업재해에 관한 국제통계가 지나치게 정부에 불리하게 나오는 것을 회피해 보려고 1인당 국

6) 노동생산성증가율은 실물개념이기 때문에 그 비교대상은 명목임금인상률이 아니라 실질임금인상률이어야 한다.

민소득이 7,000달러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국제 비교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율은 비교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의 '92년 산업재해율은 74년의 미국과 스웨덴의 2배 수준에 이르며, 10여년 전의 싱가포르보다도 못한 상태이다.

<표 12> 사망재해 발생률의 국제비교

| 국 가 | 연 도 | 1인당 국민소득(\$) | 제조업 | | 건설업 | |
|-------|------|-----------------|-------|-------|-------|-------|
| | | | 도수율 | 천인율 | 도수율 | 천인율 |
| 한 국 | 1992 | 7,007 | 0.074 | 0.188 | 0.185 | 0.444 |
| 미 국 | 1974 | 6,887 | 0.030 | | 0.160 | |
| 일 본 | 1977 | 6,177 | 0.020 | | 0.090 | |
| 프 랑 스 | 1976 | 6,726 | | 0.091 | | 0.415 |
| 독 일 | 1976 | 7,271 | | 0.140 | | 0.390 |
| 영 국 | 1979 | 7,530 | | 0.021 | | 0.095 |
| 캐 나 다 | 1974 | 6,841 | | 0.170 | | 0.520 |
| 스 웨 덴 | 1974 | 7,090 | 0.030 | | 0.080 | |
| 노르웨이 | 1975 | 7,003 | | 0.056 | | 0.165 |
| 오스트리아 | 1978 | 7,597 | | 0.189 | | 0.597 |
| 이탈리아 | 1981 | 7,189 | 0.040 | | 0.230 | |
| 싱가포르 | 1983 | 6,921 | | 0.017 | | 0.068 |

주 : 1) 도수율 = 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 × 1,000,000

2) 천인율 = 재해자수/노동자수 × 1,000

자료 :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각년도.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4.12.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재해 분석과 경제적 손실규모 추정」, 1995. 8에서 재인용.

더구나 최근까지 도수율과 천인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000시간 작업중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율을 나타내는 강도율과 10,000명당 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표시하는 만인율은 89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산업재해의 발생빈도는 감소하였으나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재해로 인한 실제 피해가 더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95년 상반기 들어서는 만인율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채를 띤다. 95년 상반기 중에 산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1,110명으로 94년에 비해 38명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산재 대상 근로자는 90만명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만인율은 1.40으로 0.23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재해위험이 덜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산재보상보험법의 대상으로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수치상 중대재해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산술적인 효과'라고 하겠다. 통상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노동자는 매년 30만명 정도의 유

모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아직도 하루에 6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복수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는 '숫자 유희'로 문제를 미봉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단체협약에 산업안전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 세밀화함으로써 산업재해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3. 김영삼 정부의 '96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 목표를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력을 지속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두겠다고 밝혔다. 그것의 핵심은 '경기연착륙'을 유도하는 것과 '경기양극화'를 바로 잡는데 모아지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경기부양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경기하강 속도를 늦추는 것도 그렇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그렇다.

정부는 '96년 경제운용의 기본목표로, ① 물가안정 지속과 경기연착륙 유도, ② 경기양극화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 ③ 경제개혁의 추진과 기업환경의 개선, ④ 국민생활경제의 안정과 질 향상, ⑤ 경제세계화의 지속적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95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로 당초 목표 수준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물가문제에 대한 심각도는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정부 예산은 경기하락을 막기 위한 팽창 예산으로 잡혀 있고, 추가적인 통화공급을 지난해보다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1/4분기에는 재계의 최대요구치인 16%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기가 급랭할 때에도 내수를 진작시키기보다는 수출을 지원하거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여유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양극화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대기업에 편중된 정부정책, 불로소득의 만연과 금융개혁의 미비로 인한 만성적인 고금리구조가 중소기업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중소기업지원대책」에는 중소기업청 신설, 2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기업에 대한 또다 큰 엄청난 지원과 그들에 대한 규제 철폐가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대책에는 병역특례노동자를 3만9천명으로 확

대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故)조수원 열사의 죽음으로 병역특례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마당에, 정부가 여전히 인력정책의 차원에서 공급확대에 급급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개혁 분야에 있어서 노동자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개혁'조치는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다. 경제개혁이라는 말의 의미조차 규제완화와 기업환경에 대한 개선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 국민들이 믿고 있는 바의 경제개혁은 금융실명제의 보다 철저한 실시와 불평등구조의 개선, 경제력집중의 해소, 부패비리 구조의 근절 등 경제 민주주의적 요구인데 반해, 정부에게는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인 셈이다.⁷⁾ 이른바 '보수적 개혁'으로 입장을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비자금 사건으로 얼어붙은 재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투자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더 이상의 획기적인 경제개혁 조치가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보겠다. 개혁과제에는 비자금 사건이후 전국민적인 요구로 제기되고 있는 '정경유착의 근절'과 '금융실명제의 개혁적 보완'은 언급조차 없다. 금융실명제 운영을 위한 진산화를 비롯한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⁸⁾ 부동산실명제도 전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끝내 기업의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림으로써 그 취지가 퇴색하고 말았다. 대신 규제완화(이제는 '규제개혁'이라고 부른다)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의무고용규정은 폐지할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이름 하에 임금과 노사관계에 대한 안전을 개혁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시간제근로의 활성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도 이 부문에 속해 있다. 정부가 재작년에 통과된 일본의 파트타임노동법과 같은 법제정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⁹⁾ 요컨대 경제개혁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기업과 자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¹⁰⁾

7) 이와 같은 개혁방향은 정부 스스로 자신을 개혁하겠다는 것으로, 경제개혁이 정부와 기업사이의 의사소통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행국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그들이 추진하는 개혁의 철저한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

8) 95년 9월말 현재, 수직상으로 실명예금의 실명확인율은 97.3%이고, 가차명예금의 실명전환율은 98.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차명예금의 실명전환율은, 95년 6월말 현재 3조5천49억원으로 실명제 실시 이후 불과 117억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차명금융자산은 전체금융자산(300조)의 10% 규모인 약 30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10%의 차명계좌만이 실명화되었을 뿐, 나머지 90%의 막대한 자금이 금융실명제의 바깥에 온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9) 파트타임노동자들에 대해서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대거나 연월차휴가를 주지 않는대거나 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10) 이 밖에 기업환경 개선과제에는 국책연구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 공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원, 비용절감 등 상당 부분 노동조합에 대한 공세적인 조치들을 예

반면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물가안정, 교통난 완화, 환경산업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등, 지극히 원론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삶의 질'이 아직은 구색맞추기용으로 정권의 요란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시기가 되면 또 붓물처럼 쏟아질 각당의 공약 속에서 '삶의 질'을 둘러싼 말 잔치는 다시 풍족해질 것이다.

얼마전 어느 텔레비전의 특집대담 프로에 출연한 나용배 신임 경제부총리는 인터뷰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없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우리 정부의 1년 예산이 60조원을 조금 넘는데 비해 국내 유력제철의 연간 매출액은 70-8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일, 그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경제개혁의 후퇴와 보수주의로의 완전한 경도, 이것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고 있는 길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이 경제정책의 계급적이고 계층적인 성격을 변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은 조직적으로 자신의 대표를 의회에 내보내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소극적인 참정권인 투표권의 행사조차 개인적이고 우연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실천이 소비자와 시민 등 다양한 사회세력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을 때, 경제정책이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4. 노동운동과 경제개혁

정부의 경제정책 기초에서 특별법 제정과 같은 갑작스런 변화나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신경제정책에서부터 고통분담론, 국가경쟁력 강화론, 그리고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정부정책은 경제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의 연속이었고, 국제경쟁에 이길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대신에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등 당초의 경제개혁 공약들은 비록 시행되기는 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개혁'으로서의 성격은 완전히 탈각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제 더이상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으며, 경제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인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경제는 제때에 바로잡지

상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않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경제개혁에 관한 국민적인 요구가 참대로 차 있는 상태이다. 아직 한국기업의 수준과 한국자본주의의 위치로 볼 때 경제문제를 완전히 기업의 손에 맡겨둘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재벌그룹이 아무리 비대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자기자본의 몇 배에 달하는 은행부채를 지고 있는 허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경기가 조금만 움츠러도 정부의 추가적인 자금공급이 없이는 언제든 금융공황으로 불거질 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재벌그룹 하나가 방만한 경영을 계속하다가 부도를 냈을 때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과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우성그룹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세계화를 위해서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비자금 사건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의 허점은 반드시 '개혁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부동산실명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경제의 엄청난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전근대적인 소유와 경영은 혁파되어야 한다.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이룩하기 위해서는 금융구조의 개혁과 직업훈련제도를 포함한 인력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은 철회되어야 하지만, 안전보건과 환경문제를 다루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장치들은 더욱더 장려되고 확대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기업의 경영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핵심적 구성원인 노동자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진경제로의 도약과 복지사회의 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관계를 다루는 법과 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위의 모든 것들에 앞서서 선결과제가 되고 있다.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없이는 어떤 경제정책도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노동법은 전국적인 차원의 산업평화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고 있는 노사관계의 규제들은 과감하게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운동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려는 자세와 자기개혁이 요구된다. 기득권에 안주해서 현상유지에 급급한 조직들은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노동자는 생산적이고 개혁적이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노동자계급 내부의 연대와 평등은 물론 수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 청소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들은 미래의 조합원들이기 때문이다. ■